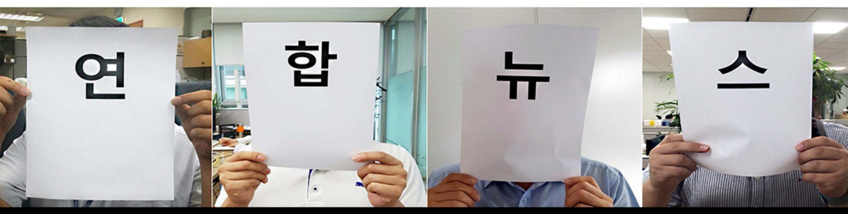
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

노보 특보



연합뉴스 경영진은 도무지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.

1월1일 이후 입사한 기자는 임금삭감

경영진은 올해 1월1일 이후 입사한 기자직의 임금테이블을
기존 대비 81%로 삭감한 '신연봉제'를 도입
똑같은 채용조건으로 뽑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
1월1일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
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, 정의에 명백히 어긋남

손해배상에 관한 내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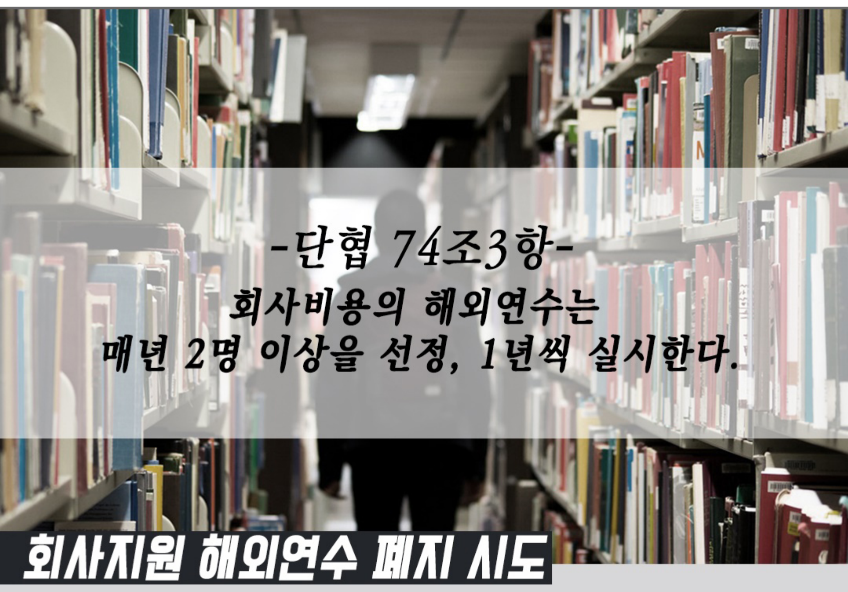
경영진으로만 구성된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면서
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는 내규는
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.
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
"오보에 손해배상"!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...

노트북 분실한 기자들 징계까지

노트북 분실로 회사에 신고해 대여노트북을 받아 쓴 기자들
새 노트북 교체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영진은
"부서장을 통해 정식보고를 했어야 한다"며 기자들 징계
노트북 배상액 42만원도 받아냄
물품관리는 회사책임인데…일할 맛이 안난다!

노조비 일괄공제 삭제요구

경영진은 2016년 임협 및 단협보충교섭 **첫 만남**에서
"노조의 자율성을 위해
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을 삭제하자"고 요구
무단협 상태인 언론사조차 조합비 일괄공제를 유지하는데
연합뉴스는 노사관계가 얼마나 나쁘길래 그런 요구를 할까.



-단협 74조3항-
회사비용의 해외연수는
매년 2명 이상을 선정, 1년씩 실시한다.

회사지원 해외연수 폐지 시도

회사는 작년부터 해외연수자를 안 뽑고 있음
심지어 7월29일
비제작부문 해외연수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철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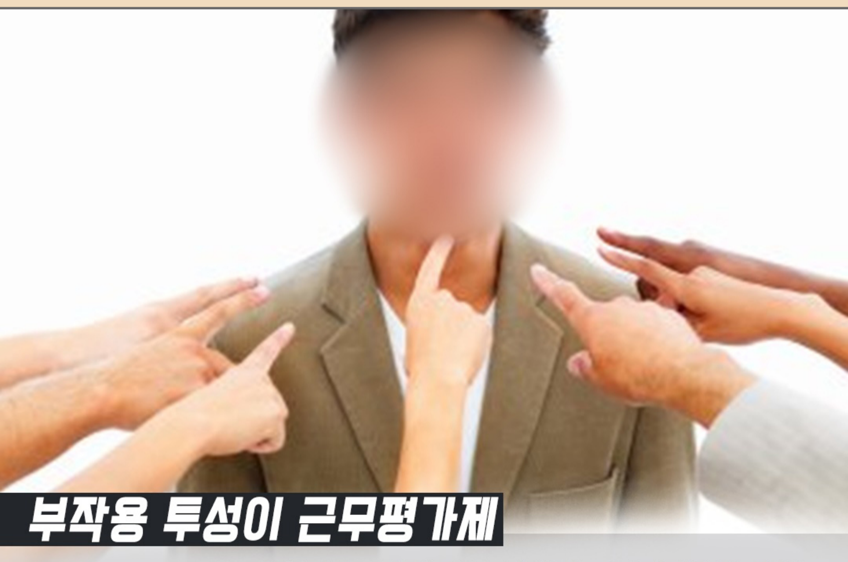
작년 경력직 입사자에 신연봉제 적용

작년에 입사한 경력직 기자 3명
입사당시 대졸 기자직 임금테이블로 설명들음
1년이 지나고 올해 7월 말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며
"올해 새 계약을 맺는 것이니 신연봉제를 적용한다" 통보

학자금≠회삿돈

학자금 개정 밀어붙이기 시도

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**별도법인의 기금임**
운영기준 개정시 반드시 노조동의가 있어야 함에도
경영진은 선시행-후협의를 하겠다고 밀어붙이기를 시도
고용노동부 "기금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
사측이 일방 개정하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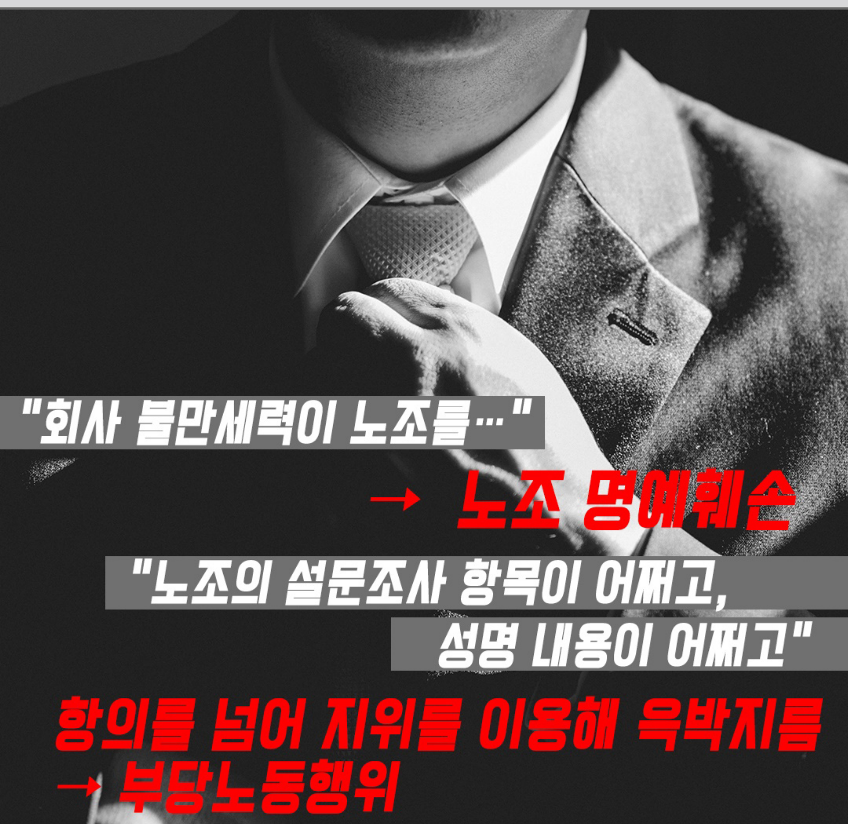


부작용 투성이 근무평가제

SS등급~D등급으로 나누는 근무평가제 강행
소수부서, 업무강도 높은 부서에 불리
상향식 평가도 없고, 이의제기 절차도 없음
격려금 차등과 승호누락으로 **성과연봉제 효과 노려**
기자들을 돈으로 눈치보게 만드는
성과연봉제는 언론사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음

1년8개월째 편집국장 직대체제

경영진은 103일 파업의 성과인 편집총국장제를
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으로 무력화시키더니
새로운 단협에서 정한 편집국장 투표도 외면
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공정한데
왜 경영진은 업무포털을 고집하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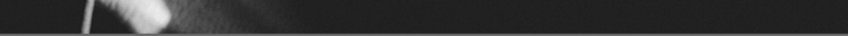


"회사 불만세력이 노조를…"

→ 노조 명예훼손

"노조의 설문조사 항목이 어쩌고,
성명 내용이 어쩌고"

항의를 넘어 지위를 이용해 윽박지름
→ 부당노동행위



조합원 여러분, 연합뉴스가 지금 정상입니까?